

참여·번영·포용...5대 가치 반영한 '문화 광주' 실현

이용섭 시장 문화비전 20대 정책 발표 문화예술계 지원 늘리고 상시 소통 어린이·노인 등 문화예술 강좌 제공 문화 다양·포용성 도시 브랜드 확산

이용섭 광주시장이 참여·실현·누림·번영·포용 등 5대 가치를 반영한 문화 비전을 발표하고,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문화예술계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26일 광주시가 지정한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 특별주간 현장 의견 수렴 결과물이다.

5대 비전은 함께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 구축, 함께 실현하는 문화예술생태계 지원정책 강화, 함께 누리는 문화 향유 서비스 체계 마련, 함께 번영하는 미래 문화환경 조성, 함께 포용하는 문화공동체 실현이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민관 협치 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문화예술 미래위원회,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 등 기구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매일 마지막 주요일에는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을 운영, 문화예술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시 소통체제로 전환한다.

문화예술생태계 지원정책도 확대된다.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금 사업 통합 공모제도를 통해 장애인과 여성, 신규단체를 비롯한 역량있는 민간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년 주기 평가우수사업을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정산도 간소화한다. 지역예술계의 숙원사업인 창·

제작 및 연습공간을 지원하고, '예술인보듬 소통센터'를 개설해 예술작품의 판로개척, 역량개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예술인 실태조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을 통해 예술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향유 서비스 체계 마련에도 집중한다. 아마추어 예술인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선 예술단체, 동호회, 동아리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 학생, 일반인, 노인 대상 각종 문화예술 강좌를 제공해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소양을 높인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직상설공연장, 미디어 아트센터(AMT), 광주대표도서관, 광주문학관, 선사문화체험관은 건립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지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 전담기구의 한국영상위원회 가입을 추진하고 광주여성영화제와 광주독립영화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히 첨단기술을 접목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CGI센터를 중심으로 영상·영화 등 문화콘텐츠 창작·제작 지원의 거점기반으로 조성하는 한편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애니메이션, 실감콘텐츠 등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광주시는 문화공동체 실현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예술인들의 협업과 교육을 지원하는 문화다양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매년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을 개최해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도시 브랜드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1km 이내 전시장, 공연장, 서점, 극장,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도보로 18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18분 문화공동체도시'도 구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제3기 신도시 개발 대상지인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전경.

“곳곳 정황 뚜렷한데...광주 공직자 투기 한 건도 없다니”

시민단체, 市 감사위 조사 부실 질타 직계가족·모든 개발 예정지 조사해야 산정지구는 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주산정 공공택지 지구에 대한 조사확대와 개발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정지구 외에도 광주시와 도시공사 주도로 진행된 각종 개발 사업에서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참여자치21은 1일 성명을 내고 "산정지구 개발이

검토된 2018년 이후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그린벨트를 포함한 논밭 거래가 여러 건 이뤄진 것은 뚜렷한 투기의 정황"이라며 "감사위 조사는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는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뿐 민간인 신분인 가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명 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치21은 또 "조사 범위에서 시 산하 공기업이 제외됐고, 조사지역 역시 개발 예정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며 "전북 전주시 등 타 지역처럼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해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또 "평등 준공업지역 재개발 사업 예정지

와 첨단 3지구 개발 예정지, 남구 서동 재개발 지역 등 광주지역 개발 예정지 전체를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이번 지역에선 공무원이 개발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투기로 의심되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으며, 쪼개기 등 투기행위도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산정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산정지구 개발 계획은 결국 주택공급이라는 명목으로 LH측에 새로운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져 있는 산정지구에 대한 주택지구 지정을 하루빨리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학 교정에 첨단산업단지...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교육부·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2만2350㎡ 규모 산학협력 공간 조오섭 '북구 혁신성장 거점 될 것'

전남대학교가 국토부·교육부·중기부의 '2021년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예산 심의에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관련 정부안이었다던 298억원에 더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16억원을 추가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린스타트업,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이어 이번 공모사업까지 선정되면서 북구는 광주역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된 '신성장 혁신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1일 조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혁신적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산학연이 연계되는 지역상생발전 플랫폼인 혁신허브를 조성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500억원(국비190억원·지방비 85억원·LH 225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대 내 1만9436㎡ 유휴부지에 연면적 2만2350㎡ 규모의 산학협력 공간이 조성되어 연구, 생산, 정주, 생활·문화 시설이 집적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학 R&D, 산학협력을 활용한 지역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전남대는 이번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단계 에메니티 혁신허브(493억원), 3단계 글로벌혁신허브(507억원) 등 총 1500억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

전남대 정성택 총장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선정은 계기로 광주지역은 산학협력과 창업지원 생태계가 혁신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며 "전남대는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위기 극복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를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모이고 다양한 상상력이 실현되는 지역 혁신역량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2025년까지 광주역 철도부지내 주거문화복지 등이 결합된 스타트업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창업 육성, 소상공인 제도지원, 문화마당 조성 등 마중물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복원시키는 프로젝트다. 또 그린스타트업은 창업·혁신기업 유치, 비즈니스, 주거문화복지 결합된 복합타운 조성해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와 입주보육, 연구개발 성과 공유 등이 가능한 창업 기업의 요람을 만드는 작업이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은 중흥동-전남대 일원에 청년창업기반조성,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권 지지율, 윤석열 31.2%·이재명 25.7%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차기대권 지지율이 30%대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유권자 1017명에게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1.2%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7%로 오차범위 내 2위였다.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47.3%), 대구·경북(38.9%), 중도층(33.6%)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도 36.2%를 기록하며 이 지사(22.4%)에 앞섰다. 이 지사는 40대(39.8%), 인천·경기(33.9%) 등에서 1위였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전대위원장 9.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7%, 무소속 홍준표 의원 3.7%,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7%,

정세균 국무총리 2.5%, 정의당 심상정 의원 2.4% 순이었다.

윤 전 총장 거취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31.1%로 집계됐다. '제3지대 신당' 의견은 24.9%였고 '잘 모르겠다'는 40%였다.

차기 대선 결과와 관련, '현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3.3%, '현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29.8%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서울 유권자 806명에게 조사한 결과,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 전 총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8.2%였다. 이재명 지사는 21.5%, 이낙연 위원장은 11.1%로 나타났다. 이번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는 95%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